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참고자료	2012. 2. 6 (월) 09:5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 전국 세무관서장,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추진 결의 -

◇ 신종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설치

- 전담변호사 배치, 사해행위취소소송, 체납면탈범 고발 등 엄중 대응

◇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 등 자율적 시민감시체계 구축

- 시민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현행 포상금제도를 개편하고, 모바일 신고 제도 도입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자리 창출기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율회계지침」 준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

- 호응이 좋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납세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 발굴 기회로 활용

1.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2월 6일(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를 개최하였음

○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 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음

□ 이날 발표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들을 담고 있음

○ 특히,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실천과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청'**을 지향하고자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중 「II. 3.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 참조

○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세청의 '해야 할 일'**로 숨은 세원 발굴과 탈세 대응역량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선진 납세문화 정착,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을 제시하였음

2.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 지난 해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을 설치한 이후 **1조 7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명)	3,687	4,770	4,816
금액(억원)	12,651	17,144	20,370

□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하여

-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 서울·중부·부산청은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 T/F로 설치(기타 3개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 증원)

<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예시) >

◇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것임

- 또한,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

3.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 감시체계 확립

□ 당사자간 공모·담합을 통한 **고질적 탈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 건전한 시민의식에 토대한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할 필요

* 탈세제보 건수 : 9,450건('09년) → 8,946건('10년) → 9,206건('11년)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시민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인상**(1억→10억원), **지급율 상향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임

○ 이와 함께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 감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 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참고: 타 기관 포상금 제도 확대 사례>

기 관	포상금 대상	종 전	현 행	개정시기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10억원	20억원	'11. 5월
권익위	부패행위	2억원	20억원	'06. 1월
법무부	간첩 등 신고	1억원	5억원	'11.10월

* 미국은 추가 징수세액의 15~30%를 한도없이 탈세포상금으로 지급

○ 또한, 앱(App)을 통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인터넷·전화제보의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손쉽고 편리하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4. 일자리 창출, 자율회계지침 준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성실신고 파급효과 극대화라는 **세무조사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 조사대상 선정사항은「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한편, 1.31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14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

구분	대상 기업	혜택 요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12년)	연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3% 이상 증가
	연간 수입금액 3백억 ~1천억원	5% 이상 증가
	연간 수입금액 1천억 ~ 5천억원	10% 이상 증가
세무조사 유예 ('13년말, 지방중소 '14년말)	중소기업	3% 이상 증가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5% 이상 증가

□ 또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호응이 좋았던 **납세자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 로 확대 개편**하여

○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는 실무 세법지식의 전수와 함께 **납세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임

* 2011년 중소기업 CEO 과정 등 19개 과정에 총 7,200 여명 참여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 준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전산성실도 검증 등을 거쳐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붙 임 >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생 산 일	2012년 2월 6일(월)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담당국장	김은호 기획조정관 김덕중 징세법무국장	담당과장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강민수 기획재정담당관 양병수 징세과장
담당자	윤창복 서기관(397-1042), 김태호 서기관(397-1272) 박찬욱 사무관(397-1602)		

세미나 콜센터 126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자료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2. 2. 6

NTS 국세청

순 서

Ⅰ. 지난 해 국세행정 운영성과 ····· 1

Ⅱ. 세정여건 전망과 시사점 ····· 3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 8

Ⅳ.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9

1.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 9

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 12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 15

4.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 17

5. 납세자와 국세청이 상호 신뢰하는 세정문화 확립 ····· 19

Ⅴ. 실천계획(Action Plan) ····· 21

Ⅰ. 지난 해 국세행정 운영성과

1 주요 성과

□ **소관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하여 재정건전성 뒷받침**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숨은 세원 발굴과 자발적 성실 신고 유도**에 주력하여 소관 세입예산(175.1조원)을 **5조원 상회하는 성과 거양**(잠정 180조원 징수)

< 숨은 세원 발굴 추징실적 >

주요 분야	실적(억원)
계	**41,897**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	9,637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11,408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적극 대응	3,632
재산은닉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7,220

□ **'성실납세자는 편안한,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세정 실천**

○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세정지원**

◇ 모범납세자 우대 확대, 조사부담 완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도입 등
◇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여(33명)

○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과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최초 시행 등 탈세 예방·대응체계 강화

○ **최초로 공정세정 포럼 을 개최**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조세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과세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원칙 입법화, FIU 금융정보 공유확대** 필요성 적극 제기

□ **경제적 약자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4,020억원(522천 가구) 지급, 영세납세자 9만명 지원
◇ 2년 연속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11.11월)

○ 외국의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해외진출기업 보호·지원 강화**

◇ 중국(상하이), 베트남(하노이)에 세무관 증설('11.1월)
◇ 양자 국세청장 회의(13회), 해외진출기업 세무설명회(65회) 개최

□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세무조사 절차 준수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의식변화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 확산**

- 전국 조사요원에 ABC교육 실시(2,792명), 자율적 변화 실천 결의대회(5월), 퇴직공무원을 위한 청탁·알선 금지 제도화(6월)

○ 세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SNS 등을 이용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미래인재 선발, BSC평가, 사무관 역량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 중앙·지방행정기관 성과관리 발표대회 최우수기관 선정('11.10월)
◇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행정기관 부문), 블로그 어워드 수상('11.12월)

2 종합 평가

□ 역외탈세 차단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공정세정 포럼 등을 통해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처**

○ **성실납세자와 탈세자 대응을 엄격히 차별화**하여 국회·언론 등으로부터 **공정사회 추진 선도기관으로 평가**

◇ 국세행정 신뢰도 상승('08년 71.8→'09년 73.2→'10년 74.0→'11년 74.7)

Ⅱ. 세정여건 전망과 시사점

1 세입여건 측면

◇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세입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2년 **소관 세입예산은 192.6조원**, '11년 실적(잠정) 대비 약 **7% 증가**

가. 대외적 여건

□ (**글로벌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

○ 주요 선진국은 향후 2~3년간 1%, 신흥국도 5% 내외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IMF 3.3%)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도 4% 이하 예상(OECD 3.8%, 정부 3.7%)

□ (**대외의존도 상승**)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증가되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락위험** 상존

○ 대외의존도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07년 82%→ '10년 102%)

* 주요 OECD 국가의 대외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합계비율, '10년 기준): 한국 102%, 독일 87%, 영국 62%, 미국 29%, 일본 25%

나. 대내적 여건

□ (**가계부채 급증**)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가계부채 규모가 892조원**('11.9월 기준)에 이르고, **가계저축률은 3.9%**로 OECD 평균 5% 내외에 미달

*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과거 20%를 상회하여 세계 1위('87~'99년)였으나, 2001년 이후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하

□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급진전, **베이비부머**('55년~'63년생, 712만 명)의 본격 은퇴 등으로 **국내경제의 활력 저하** 우려

○ 서비스 부문 중심의 내수 활성화, 새로운 성장 동력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경우 **중산층의 실질소득 하락**을 가져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성장 기조 고착화 초래**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간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도래 예상

-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11년 33.3% → '15년 27.9%로 축소할 계획이므로 '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정역할 증대 필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선진국의 세제 개혁방향>

구 분	국가채무비율	주요 내용
미 국	100%	10년간 3조달러 감축안 추진 (1.5조 증세안 포함)
유로존	85%	세율 인상, 세목 신설(은행세, 비만세 등), 세액공제·감면 축소 등 대대적인 증세 추진
일 본	212%	단계적 소비세율 인상(5 → 10%), 한시적 소득세·법인세 추가 징수(Surtax) 등

2 납세환경 측면

◇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가 여전**한 가운데 세정환경의 변화를 이용한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계속 증가**
- 단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범죄형 탈세로 진화**

가. 탈세수법의 고도화·지능화

□ (**전통적·고질적 탈세**)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이 부족하여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에 대처 미흡**

○ '09년 고액권 화폐발행 이후 **현금거래 탈세가 보다 대형화**되고, 자금세탁·은닉, 장부조작·파기 등 **점차 범죄화**하는 경향

□ (**융·복합형 첨단 탈세**) 경제의 글로벌화·IT화의 진전 등에 따라 **국내와 국제거래, 실물과 금융거래, 파생상품거래 등을 융합**하고,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첨단 탈세행위가 증가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부 **대재산가, 대기업 등의 적극적 조세회피 전략** 구사에 따라 탈세위험이 크게 증가

<탈세수법의 진화 유형>

구 분	전통적·고질적 탈세	신종·첨단 탈세
주요특성	· 거래구조가 비교적 단순 · 당사자 간 공모·담합 · 국내거래, 실물거래 위주	· 거래구조 복잡, 다수거래 융합 ·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과 대응 · 국제거래, 금융·사이버거래 이용
탈세수단 (예시)	· 현금매출 신고누락 · 허위·과다 비용계상 · 차명계좌·부동산·주식 · 명의위장 사업 등	· 주식, 파생상품 등 자본·금융거래 · 조세피난처 등 이용 역외탈세 ·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 · 인터넷 등 매개 사이버거래

나. 성숙한 납세문화 미흡

□ (**탈세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탈세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엄하게 처벌하거나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사회 분위기 팽배**

○ 탈세제보도 사익 추구를 위한 보복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건전한 시민의식에 토대한 탈세 고발은 부족**한 편

□ (**납세자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은 반면, 국민소득 수준에 걸 맞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

○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식하는 **그릇된 납세의식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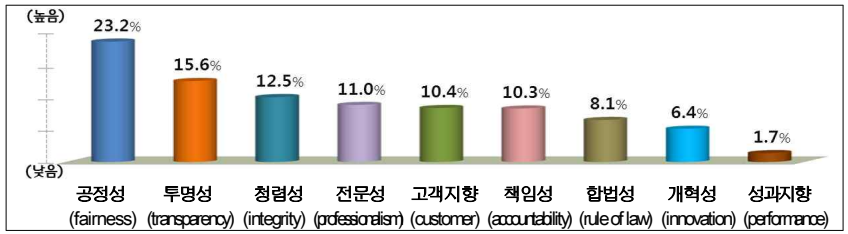
3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

◇ 현재 세정여건 하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 정책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개방형) 실시**

* 학계, 세무대리인, 모범납세자, 유관기관 등 344명 설문조사('11.12월)

□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와 비전**

○ (**핵심가치**)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공정성**(23%), **투명성**(16%), **청렴성**(12%)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



○ (**비전**) '**공정 투명한 세정운영**'(41.8%),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청'(14.5%) 취지가 비전에 포함되기를 희망

□ **국세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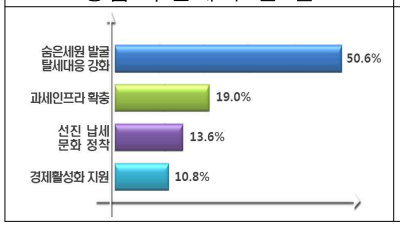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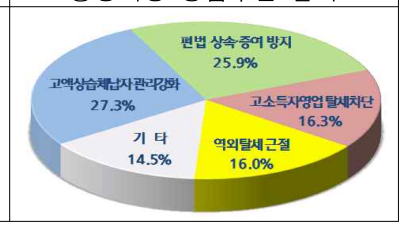
○ (**기능 충실도**) 15개 제시 항목에 대해 **평균 3.6점**(5점 만점) 평가

- **세원투명화 노력, 편리한 납세서비스, 재정수입 확보** 등은 높게 평가한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 규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 지능적 탈세자 처벌** 등은 비교적 낮게 평가

□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① **숨은 세원 발굴**과 **탈세 대응역량 강화** ② **과세인프라 확충** ③ **선진 납세문화 정착** ④ **경제활성화 지원** 순으로 응답

○ (**공정세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①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②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방지** ③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차단** ④ **역외탈세 근절** 순으로 응답

<중점 추진해야 할 일>	<공정세정 중점추진 분야>
	

4 시사점

□ (**미래전략 수립**) 향후 **어려운 세입여건**은 경기변동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

○ 미래 국세행정에 대한 **실행 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산업별·업종별 세원관리 강화** 등 선제적 대처 요구

□ (**현장소통 강화**) **세원현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 (**공정세정 강력 추진**) 국민들은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 규제**를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고,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도 국세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선진일류 국세행정

추진목표

튼튼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 구현으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뒷받침

운영방향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

1.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 확보
2.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 전개

실천과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공정한 국세행정 실현	활기찬 국민경제 지원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
• 대기업, 대재산가 등 철저 검증 • 체납 세금징수 역량 강화	• 역외탈세 행위 강력 대처 • 변칙 상속·증여 적극 방지	• 중소·지방기업 조사 대폭 완화 • 영세 납세자 등 최대한 지원	• 성실 납세자 우대·존경 • 선진 납세문화 운동 전개

납세자와 국세청이 상호 신뢰하는 세정문화 확립

Ⅳ.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어진 세입예산 목표를 이루는 것은 물론,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의 초석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대기업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 강화

○ (검증방법) **순환조사 주기를 1년 연장**(5년)하여 부담을 다소 완화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3년**(현행 2년)으로 **확대**

- 대주주 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포렌식 조사를 활성화**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경우 **조사기간 탄력적 운영**

◇ 대기업(외형 5천억원 이상)은 법인의 0.1%에 불과하나 법인세수의 56% 점유 등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점 관리할 필요

○ (중점분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중점 조사

-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국내소득의 변칙적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 강화**

* 대법인 조사 시 국제거래 사전분석 강화, 국제조사 전문인력 집중 투입

□ 대재산가는 세부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 (주요대상) 그간 재산증식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보유재산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부동산 부자, 주식 등 고액 금융자산보유자, 중견기업 사주** 등의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

○ (검증내용) 대재산가와 친인척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체 현황, 소득·재산 변동내역** 등을 **통합·누적관리**

-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국외 편법 상속·증여 혐의** 포함

□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에 엄정 대처

○ (취약업종 관리) **취약업종***은 현장 수집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유도

-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 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 실시

◇ (예)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 GIS를 이용한 입체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업자의 **소득탈루 차단, 세적관리 과학화** 도모

- 주요 상권 내 **임대여건이 유사한 사업자간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하여 과소신고 혐의자 선정 후 개별 검증

○ (전자상거래 관리) 세원이 불투명한 **사이버 거래**는 인터넷 포탈, 오픈마켓 사업자 등을 통해 **과세정보를 적기 수집 활용**

- 소셜 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등을 활용한 고질적 탈세행위** 적발에 역점

□ 현금 징수실적 제고 등 체납징수 역량 강화에 총력

○ (체납정리 인프라) 금융재산 조회, 신용회사 정보제공 등 **현행 체납정리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고액체납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채권**을 **조기에 파악**한 후 거래처 채권을 압류하여 조속한 납부 유도

- **명단공개 확대 시행**(기준금액 7→5억원 인하)을 차질없이 추진

○ (현금징수 제고) 체납자와 동거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강화**, 현금징수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현금징수실적을 제고

* 현금징수액 : 8.0조원('09년) → 8.1조원('10년) → 8.1조원(11년)

□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화 지속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공급가액 10억원이상)까지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구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발급에 동참하도록 유도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개선(종전 다음 달 15일)하여 지연·미전송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등 관리 강화

- **QR코드 인식 단말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 편리성 제고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장기 세수기반 확충**

○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탈세에 대한 분석·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 10년 후의 **국세행정 미래상**을 토대로 **미래의 세정수요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반영**
- 현재와 미래 업무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전산설계, 장비도입** 등 단계적으로 추진

* '13년 시스템 개발·구축 → '14년 시험가동 → '15년 개통 예정

○ (**미래전략 마련**) 미래 세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국세행정 미래 전략'**을 수립

- 미래 세정여건에 대한 전망, 도전·제약요인 등을 토대로 **국세행정 분야별로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발굴**

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 반사회적인 역외탈세 등 불성실납세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 (**필요성**) 신종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증가**

-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요한 추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금을 징수**할 필요

○ (**전문 관리조직**) 변칙적 거래 등을 통한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

-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

* 서울·중부·부산청은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 T/F로 설치(기타 3개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 증원)

<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예시) >

◇ 역외탈세 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 (**대응방향**) 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로 혐의높은 자를 우선 선정

-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
-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대부분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

□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

○ (**추진 방향**) 역외탈세 대응 2년차를 맞아 **국부유출, 해외소득 미신고 등을 중점 적출**함으로써 **역외탈세 심리를 차단**

- **역외탈세 조사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고, **해외 현지 파견요원을 정예화**하여 활용도가 높은 고급정보 수집

○ (**추진 계획**)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성과를 적기에 공표**하여 사회적 경각심 제고

- 미국·일본 등과 **동시·파견조사 협력강화**,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자동 정보교환하는 국가 확대** 등 국제공조 활성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신고포상금제 시행***

- **미신고자 처벌 강화, 탈루소득 가산세 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과태료율 상향(종전 3~9% → 개정 4~10%),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방지**

○ (**자본거래 검증**) **주식 명의신탁**,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해 철저히 검증

- **계열법인간 지분 변동을 상시 관리**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

○ (**차명재산 관리**) 금융계좌, 주식, 부동산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지속 관리**하여 체납처분과 과세에 적극 활용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시 부동산·주식·금융재산은 물론 **고액채권 보유액의 변동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증

* 출처불명자금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증여추정 규정 명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고질적인 기초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엄정 대응**

○ (**자료상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자료상 조기 적발체계**를 구축하고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 유사석유류·재활용 폐자원 등 **거래질서 문란품목**에 대해서는 전·후방 거래단계 사업자를 포함한 **전국단위 동시조사 실시**

○ (**명의위장**)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파산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무자력자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사전 예방**

- 유흥업소의 명의위장 차단을 위해 **자금출처명세서 미제출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거부기준 마련** 등 실질적 심사 강화

□ **FIU정보 활용 등으로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적극 차단**

○ (**FIU자료 활용**)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적·범죄형 탈세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차명계좌·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 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세무조사 시 FIU자료를 적극 활용**

○ (**금융정보 확대**) FIU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2천만원 이상)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FIU에서 보유중인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10년 기준)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조약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 (**투자자 명단 제출**)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실질귀속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조세조약 혜택 배제**

-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여과장치로 작용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3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영세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중소·지방기업 등이 사업에 전념토록 최대한 지원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3%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외형 3백억 미만) 등*에 대해서는 '12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 검토

-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14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 연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은 5%, 5천억원 미만은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도 조사선정 제외 혜택 부여

○ (세무조사 축소)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확대

* (종전) 10억원 이하 25만개, (금년) 100억원 이하 41만개 기업 대상

○ (간편조사 활성화)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조사기간이 짧고 사무실조사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 간편조사 건수 : '10년 835건 → '11년 1,135건

□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영세납세자 지원) 협약체결 **전통재래시장**(101개)과 **영세 집단상가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도우미 지정, 입증요건 완화** 등 권리구제 강화

○ (체납자 회생 지원) **영세체납자**의 개별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 도입**

- 압류실익이 적고 회생을 저해하는 **장기 압류재산 정비**

○ (민생침해 탈세자)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 농수축산물 유통업종**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실시

□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지원을 위한 세정외교 전개

○ (진출기업 지원) 외국의 불합리한 과세로 고충을 겪는 국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럽,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강화**

- 국가별 상황에 맞는 **상호합의·APA 대응전략** 마련

○ (개발협력) 개발도상국과 **개발원조 차원**의 세정협력 확대

- 개도국 세정발전 지원을 위해 **전자세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양자교류** 적극 추진

□ 외국계 기업 우대 등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 (외국인 투자 활성화) **외국계 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사완화 혜택 부여,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적극 지원

○ (국산주류 진흥)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전통주 등 국산주류 비치** 적극 권장 추진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 (대상자 확대)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청편의 제고, 심사절차 간소화**

- **휴대전화 신청제도 도입** 등 신청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되,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 근로소득자 중 수급대상자 확대 : '11년 67만 → '12년 114만 가구

○ (자영소득자)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미등록 사업자 파악 확대** 등 소득자료 보유율 지속 제고

* 금년부터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13만 가구) 확대 시행

4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 사회적 기여가 큰 성실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가는 국세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성실납세 포상**)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 를 국민공모 등을 거쳐 선정 포상

-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확대**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 신설

○ (**성실납세자 우대**) **금융우대 협약** 확대, **KTX 요금 할인**(15%), **민원 우선처리, 교육원 시설 이용** 등 혜택 추가

□ 신뢰에 토대한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모델 정립

○ (**대기업과 협력 확대**) 대기업과 대주주가 **성실납세를 기업경영(Corporate governance)의 핵심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담회, 포럼 등 수평적 소통기회 확대**

- 조세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자발적 협력 유도

○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예정인 **자율회계지침 준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전산 성실도 검증을 거쳐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납세자 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 로 확대 개편**하여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세법지식 전수와 함께 **납세 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장(場)으로 활용

*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추진('11년 19개 과정 7,200여명 참여)

□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선진 납세문화 운동 전개

○ (**공정세정 포럼**) 납세의식 제고와 조세제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회 공정세정 포럼**」 **개최**

- **대기업·대주주의 세금에 대한 인식 변화, 세무조사 협력 의무 법제화** 등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논의

○ (**세정홍보**) **세금의 긍정적 기능과 탈세에 대한 건전한 시민 감시의식**이 확산되도록 홍보전략 다양화

- **선진국의 납세문화**와 역외탈세, 체납실태 등 **탈세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제작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 감시체계 확립

○ (**제도개선**)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등 **현행 포상금제도 개편 추진***

-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부여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검토**

* 포상금 한도액 대폭 인상(예: 1억 → 10억원), 지급률 상향조정 등

○ (**시민감시 강화**)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 탈세 감시단** 을 발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탈세감시 활동 전개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3회 이상 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반영
- 앱(App)을 통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인터넷·전화 제보의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손쉽고 편리하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보 방법을 지하철 광고, 무료신문,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 감축 추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업자·세목·유형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

* '08년에 납세협력 비용을 최초로 측정('07년에 7조원, GDP 대비 0.78%)

5 납세자와 국세청이 상호 신뢰하는 세정문화 확립

◇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부실과세 방지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

○ (**부실과세 방지**)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기간 범위 등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실과세에 대해서는 **정식 감사 절차를 통해 징계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지방청간 **교차 감사**를 통해 세정의 공정 투명성 확보

○ (**납세자 권익존중**)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존중 기구**로 정착

- 현행 **조사권한 남용 견제장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사 외에 **현장확인 과정의 권리침해 유형**도 발굴·개선
-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종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소관 부서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 도입

□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조정·정비

○ (**세정생산성 제고**) 본·지방청의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과세실익이 낮은 업무는 줄이고 **생산성 높은 업무를 발굴**

- **불요불급한 업무량 축소, 일선 업무집중 해소** 등을 위해 본·지방청, 세무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 협의체** 상시 운영
- 세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수기여도, 성실신고 파급효과** 등 **총괄지표 위주**로 성과평가체계(BSC) 개편

* 업무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목표설정이나 투입지표 평가 지양

○ (**지식관리시스템 개편**) 세원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무지식을 쉽고 빠르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멘토**로 기능

- 본청의 지식정제 책임을 강화하여 **고품질 지식 DB를 구축**하고, 지식과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실명으로 누적관리**

○ (**전자세정 고도화**) **정보화센터를 중부청까지 전면 확대 구축**하여 과세자료 입력, 오류정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전자서고 확대** 설치, 안내문 등에 대한 **전자팩스 서비스 확대**

□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여 조직역량 제고

○ (**인력 관리**)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 발전, 여직원 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중장기적 관점의 인재양성모델 정립**

- 업무량 감축방안 등 **우수 아이디어 제출직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포상, 근무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 대폭 확대**

○ (**교육훈련**) 현장 실무역량 향상과 핵심 정예요원 양성 위주로 **교육원 직무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

- **관서별 실정에 맞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포상

○ (**전문가 양성**) **국제거래분야 전문보직제**를 본격 시행(100명 → 300명)하고, **외부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여 소송전문가 양성

□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렴문화 확산**)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한 공직윤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직장 인성교육 강화**

- **ABC*교육** 지속 추진, **청렴동아리** 활성화, 성과평가에 **청렴도 반영** 등 자율적 청렴문화 운동 지속 전개

*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Attitude), 행태(Behavior), 문화(Culture)를 의미

○ (**자율적 변화 실천**) 납세자정보 보호, 전관예우 방지는 물론 **세정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 제고**

Ⅴ. 실천계획(Action Plan)

1. 추진 체계

□ 핵심 추진과제는 T/F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세수관리 특별대책반) 월별 **세원변동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추진 성과**를 평가 보완

○ (미래전략기획단) 향후 **세입여건 변화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를 지속 발굴**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10년 후의 국세행정 미래상**을 토대로 TIS 등 국세행정 **업무체계 전반을 재설계**

□ '현장중심 세정' 운영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국세행정위원회) **주요 국세행정 변화 계획, 추진과제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심의 자문

* 민간위원(13명) 포함 14명으로 구성(위원장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민·중산층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일선 관서의 **납세자 권익존중 위원회** 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

* '09.4월 설치 이후 총 199,350명에 대해 세금 애로 및 고충사항 해결 지원

○ (공정세정 포럼 등)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과 공정한 과세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제도 행정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2. 세부 실천계획

□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 GIS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 관리 강화	1월
	· 전자세금계산서 개인(공급가액 10억원 이상)까지 확대	1월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체납자 매출채권 조회	4월
하반기	· 국세청 미래전략 마련	8월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산 설계와 장비 도입	12월
연 중	·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 강화	1~12월
	·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과 집중조사 실시	1~12월
	· 사이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1~12월
	· 체납정리 인프라 활용, 우수직원 우대	1~12월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설치	2월
	· 자료상 조기 적발체계 구축	2월
	· 유흥업소 자금출처명세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6월
하반기	·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10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2월
연 중	· 동시·파견조사 협력 강화 등 국제공조 활성화	1~12월
	· 주식 명의신탁 등 편법적 자본거래 검증 철저	1~12월
	· 차명재산 관리와 자금출처조사 범위 확대	1~12월
	· 세무조사 시 FIU자료 적극 활용	1~12월
	·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조약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1~12월

□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 전통시장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발	3월
	· 영세체납자를 위한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3월
하반기	· 확대된 수급대상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9월
	· 전통주 육성 지원을 위한 고시 제정	9월
연 중	·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지속적 조사 실시	1~12월
	· 전통재래시장 등 영세납세자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1~12월
	·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 지원을 위한 세정외교 전개	1~12월

□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납세풍토 조성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 아름다운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 선발 포상	3월
	· 금융우대 등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3월
	·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 로 확대 개편	3월
	· 제2회 공정세정 포럼 개최	6월
하반기	· 성실납세 사례에 대한 동영상 제작·보급	7월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2월
연 중	·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수평적 소통기회 확대	1~12월

□ 납세자와 국세청이 상호 신뢰하는 세정문화 확립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조정	3월
	· 민원 개선방안 권고 등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화	4월
하반기	· 지식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7월
	· 중부청 정보화센터 설치, 전자팩스 서비스 확대	9월
연 중	· 부실조사 사후관리와 적법절차 준수 철저	1~12월
	· ABC교육 등 자율적 청렴문화 운동 확산	1~12월